옛 전남도청 복원, 3년만에 본궤도 올랐다

문체부,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방식으로 시공사 선정키로
대형공사 아니지만 상징성·예술성 높고 고난도…12월 발주

5·18 민주화운동 최후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이 3년만에 본 궤도에 오른다.

당초 복원 완료시점인 2022년 보다 3년 늦어졌지만 당시의 모습이 원형에 가깝게 섬세하게 복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방식'을 활용해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은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에서 해당 방식이 상정·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실시설계 기술 제안 입찰'은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로 상징성과 예술성이 높고 고난도 기술력이 필요한 대형공사에 적용된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복원사업 자체는 대형공사가 아니지만, 건물의 상징성과 예술성이 높고 구조물 철거, 구조 보강 등 작업에 고난도 기술과 섬세한 복원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방식을 선택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문체부는 오는 12월에 공사를 발주해 내년 중 시공업체 선정을 마치고 오는 2025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관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은 올해 착수 예정이었으나 원형 복원에 필요한 공사비가 늘어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옛 전남도청복원 추진단은 지난 2019년 8월 255억원을 투입해 복원 준비를 시작했으나 3년 사이 사업비를 466억원으로 늘리면서 복원설계 용역이 잠시 중단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남아있다. 아시아문화전당 내 설치된 '미디어 월' 존치 여부가 그것이다.

미디어월은 2017년 26억원을 들여 제작한 21×9m, 10×6m 크기의 대형 화면 2개를 결합한 것으로, 현재 옛 전남도청 경찰국 뒷면에 설치돼 있다.

다만 추진단이 "5·18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건축물이 전남도청을 가릴 우려가 있다"며 미디어월을 철거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졌고 현재 논의가 진행중이다.

임성환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장은 "개별 법률에 따라 전기·통신·건축 등 따로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시공 능력보다는 전년도 시공 금액만으로 업체를 선정해 책임시공을 하기에 어렵다"면서 "기술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 원형과 같이 전남도청을 복원하기 위한 방식을 찾은 것이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옛 전남도청 경찰국 뒷면에 설치된 미디어 월에서 미디어아트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세계로 뻗은 '충장 월드 페스티벌'

MZ세대·외국인까지 즐기는 축제로 확장…닷새간 60만명 방문 '전년비 3배'

광주 대표 축제인 '제19회 추억의 광주 충장 월드 페스티벌'가 닷새 동안 이어진 여정을 마치고 17일 막을 내렸다.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이번 충장축제에는 닷새 동안 경찰 추산 60만여명의 방문객이 몰렸다. 지난해 21만여명이 방문한 데 비해 3배 가까이 방문객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축제는 주제를 '글로벌'로 확장해 세계 음악과 음식, 문화·예술을 아우르고 다양한 체험 및 전시 행사들을 운영해 7080세대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동시에 MZ세대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축제'=올해 축제는 기존 '7080', '추억'을 넘어 '글로벌' 축제로서 외국인들까지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를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회 버스커즈 월드컵 IN 광주'를 함께 진행해 거리 곳곳에서 세계 음악이 울려퍼진 것이 대표적이다.

충장 퍼레이드는 '충장 월드퍼레이드'로 한층 발전했다. 퍼레이드는 15~16일 이틀 동안 광주제일고~전일빌딩245 약 1.5㎞ 구간에서 이탈리아, 헝가리, 쿠바 출신 등 해외 아티스트와 13개동 주민, 광주시민, 동아리, 단체 등 5000여명과 함께 진행해 화합의 장을 이뤘다.

동부경찰서 옆 골목에서 20여개 국가의 음식과 전통물품을 판매하는 '세계음식·문화페스티벌' 부스도 올해 첫 선을 보여 연일 북새통을 이뤘다.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코로나19 잊은 구름 인파=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몰려든 인파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문화·예술인에게도 활력소가 됐다.

13~16일 충장로·지하 상점가 일원에서 진행된 '2022 충장르네상스, 라온 페스타'를 통해 상품 최저가 경매장, 에코상품 마켓 등을 열어 충장로 상점가 소비 촉진에 기여했다.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는 '제9회 무등아트페스티벌'을 진행해 150여 명의 작가 작품 450여 점을 전시하고 완판까지 이뤘다.

축제 열기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졌다. 광주시 동구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축제 실황 영상은 업로드하자마자 조회 수가 2만 뷰를 돌파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방문객들 또한 실시간으로 #충장월드페스티벌 #충장축제 등 해시태그를 포함한 글을 SNS에 잇따라 게시하면서 흥행을 실감케 했다.

◇대중교통 혼선·쓰레기 넘치는 거리는 아쉬워=축제 현장 곳곳에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갑작스레 충장로 일대가 통제되고 버스 노선이 변경된 것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혼란을 겪었다는 이들이 많았으며, 축제 전후 우회 버스정류장에 인파가 몰려들어 안전사고 위험도 컸다는 지적이다.

길거리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버릴 곳이 마땅치 않아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난잡하게 버려지는 바람에 볼썽사나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버스커즈 월드컵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들이 많은 때라 더욱 아쉬웠다는 평가다.

15일 축제 현장을 찾은 송경진(27·광산구 선암동)씨는 "20년 넘게 수원에서 살았던 터라 광주 지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퍼레이드로 도로가 통제됐다며 갑작스럽게 버스노선이 변경되니 어디서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엄주용(26·남구 주월동) 씨는 "분리수거가 안 된 채 길가에 쓰레기가 쌓인 모습을 보자 광주시민의식이 드러난 것 같아 창피했다"며 "길거리에서 많이 판매된 닭꼬치, 떡꼬치 등 꼬치가 많던데,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치우다 다칠 것 같아 걱정도 됐다"고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전두환 측 '회고록' 상고하고 배상금 지불 왜?

'정치적 논쟁' 노림수 지적

전두환씨 회고록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전씨측이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두환씨 법률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은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추가 증거제출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판의 실익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특히 전씨측이 17일 5·18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불했음에도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주교 변호사는 "1심과 2심에서 증인 1명의 증언만으로 증거를 삼았다는 이유로 채증법칙 위반 등을 따져 보기 위해 상고를 진행했다"고 상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2017년 4월 5·18단체들과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씨가 사망한후 지난 9월 열린 항소심에선 광주지법 재판부는 소송을 승계한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출판자인 아들 재국씨에게 5·18단체 네 곳에 각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폭 '늑장 심사'는 심의위원 부족 탓

광주 10건 중 3건, 4주 넘겨 심의

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10건 중 3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교육부 지침상 제한 기간인 4주를 넘겨 가며 심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을)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3~8월까지 시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총 295건의 학교 폭력 사건 중 약 30%인 96건의 사건을 4주를 넘겨 심의했다.

반면 전남의 경우 337건의 심의 건수 중 337건 모두 4주 이내에 심의했다.

교육부는 '2022년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서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21일 이내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7일 이내 연장이 가능해 최대 4주 이내 심의위원회가 개최돼야 한다.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면 일반적으로 당일날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